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0.(금) 12:00 배포: 2026. 5. 20.(금) 08:30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해병대 부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국민권익위, 오늘(20일)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부지의 용도폐지 및 개발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 2027년까지 부지 처분 방법 결정하기로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1963년부터 주한미군 저유소(舊 탱크팜)로 사용됐고, 2014년부터 해병대훈련장 부지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 158-3 임야 등 약 100필지를 포항 어린이 테마공원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꿈트리센터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포항시장 권한대행(부시장), 해병대 제1사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조정 회의를 열고, 장성동 해병대훈련장의 용도 폐지 및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포항 사랑 시민모임 회원 108명은 2024년 2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성동 해병대훈련장을 어린이 테마공원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장성동 해병대훈련장은 과거 1963년부터 1992년까지 주한미군 저유소로 사용되고 반환된 곳이다. 이후 국방부가 토양정화사업을 마치고 해병대훈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나, 주민들은 실제 훈련

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도심 발전을 위해 용도를 폐지하고 어린이 테마공원, 포항 숲 여가문화 복합단지 등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포항시는 부지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병대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훈련장 유지를 주장하며 난항을 겪어 왔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해병대사령부·국방부·포항시·국방시설본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청와대에서도 민원현장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음과 같은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포항시 주관으로 해병대·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 과장급과 재산관리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 추진단’을 2026년 6월 30일까지 구성하고, ▲추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지의 교환 또는 매각 등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2027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관-군 협력을 통해 결실을 얻게 된 이번 조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실무협의를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염원인 어린이 테마공원과 시민 휴식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선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



#국민권익위#집단민원#고충민원#국방군사옴부즈만#주한미군반환공여지
#해병대훈련장#포항시#해병대#국방시설본부#탱크팜

